

얼마 안되는 예산 때문에...민낫 드러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잘 나가는 문화관광프로그램 돌연 중단

‘도심관광 트레일’ 정기투어 스톱 이용객 3배 늘며 예산 일찍 소진
광주시는 중단 사실조차 몰라
위탁업체 추가 예산 요청에
시 “사정에 맞게 운영하라” 답변



‘도심관광 트레일’을 이용하려는 한 시민이 ‘예산 소진으로 11월부터는 정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적힌 공고를 보고 있다.

광주의 문화와 예술·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고지도 없이 중단됐다.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중심으로 한 문화 중심지구와 5·18민중항쟁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민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광주 문화관광지구 순회 프로그램을 중지한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실조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2개월 간의 대책이 없다는 입장어서 문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CC를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중심 지역을 도보로 둘러보는 ‘도심관광 트레일’ 프로그램의 예산이 소진돼 11월부터 정기투어 운영이 중단됐다.

위탁업체인 ‘광주도시여행청’이 2015년부터 진행한 ‘도심관광 트레일’은 ACC를 핵심축으로 도심 역사·인물, 문화예술, 관광명소 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테마별 도보관광 코스와 스토리텔링을 개발·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트레일 코스는 ▲1코스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길 ▲2코스 광주예술가 유랑길 ▲3코스 정용성의 음악산책길 ▲4코스 K-POP 아이돌 골목길 ▲5코스 민주열사의 오월길 ▲6코스 광주 꽃과 나무이야기길 ▲7코스 동명동리단길 등 총 7개의 테마

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별도 예약 없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ACC 앞 5·18 시계탑으로 나오면 전문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다. 투어는 각 코스별로 2~3시간 소요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5·18 시계탑 앞 투어안내소에 지난 1일 ‘예산 소진으로 11월부터는 정기투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A4종이가 붙었다.

‘도심관광 트레일’은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체에 위탁 운영됐다. 사업비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700만 원이 었다가 지난해 3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용객은 2015년 411명, 2016년 929명, 2017년 656명, 2018년 518명, 2019년 10월 말까지 1662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탁을 맡은 ‘광주도시여행청’과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이용객 때문에 예산소진이 빨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 해설사의 1회 비용이 4만 원인데, 급증한 이용객 때문에 해설사 인건비로 예산이 거의 소진 됐다는 것이다.

광주시 해당 부서는 광주일보가 취재를 할 때까지 정기투어가 중지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요일의 ‘도심관광 트레일’ 프로그램 중단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들은 ACC 앞 시계탑을 찾았다

가 아쉬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을 맡은 ‘광주도시여행청’ 관계자는 “달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월 보고서에 예산 소진 상황을 보고하고 추가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추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투어는 중지 했지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수투어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1년 예산이 고갈돼 있어 증액은 힘든 상황이다”면서 “내년에는 콘텐츠 보강과 함께 사업비를 증액해 9000만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민간공원 특혜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검찰, 수사 확대 여부 주목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A업체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사 대상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접수받았다.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며 광주시,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이점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등은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 ‘국립대 계약직 조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 3월 국립대인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대학 측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관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며 소를 제기했고, 1·2심은 원고를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를 한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 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필로폰 투약 남성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은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51)씨와 B(4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목포의 한 여관에서 각각 0.03g씩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 추적 끝에 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8g을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이 소변검사 결과 등의 증거로 추궁하자 목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A씨 등은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 동부권 요양시설·의원 등 점검 했더니...97%가 노동법 위반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이행 등 66곳 중 64곳서 231건 적발

전남 동부권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숙박업소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성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한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의 요양복지시설, 의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다수가 임금체불이나 서면 근로계약 미이행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66곳 중 64곳(97%)에서 총 231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28곳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분 누락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9곳,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급금 미지급 26곳,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35곳 등이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며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은 21일 우리 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99t·승선원 17명)와 B호(98t·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 어업준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이날 오전 8시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8km 해상에서 규정(50mm)보다 작은 평균 42mm 그물을 사용해 각각 7650kg, 6800kg를 포획하고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수) 신청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수) 신청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3~4억 원 등 고금리 대출 위기에 처한 무주택·무이자 대출
- 65세 이상 조합원 특소연금(이월)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